

보도시점 2026. 3. 17.(화) 11:00 3. 18.(수) 조간 배포 2026. 3. 17.(화) 09:00

## 2026년 스마트축산단지조성 사업공모, 지역사회와 축산업 상생발전 기반 확충

- 스마트축산단지 사업 공모(3.18~6.30), 사업자 선정(7월), 조성지원(~'29)
- 일자리 등 지역 경제 활력 창출과 축산업 지속 가능성 제고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3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6년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을 공모해 1개소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축산단지는 노후되었거나 민가 인근에 위치해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축사를 가축 사육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집적화·스마트화하는데 필요한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 충남 당진 스마트 낙농단지를 최초 준공(젖소, 13.9ha)하였으며 현재 경남 고성(양돈, 8.7ha), 전남 고흥(한우, 19.1ha), 충남 논산(양돈, 7.5ha), 전남 담양(한우, 3.1ha)에서 단지 완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공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지 조성 규모를 3~30ha로 완화해 각 지역의 다양한 토지이용현황과 공간 활용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조성 방법도 관련 부지를 신규 조성하는 것 외에 기존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식도 허용하였다. 그 외에 시·군·구는 조성된 단지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해 축산 관련 시설의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구분	사업요건	기대효과
조성 규모	3~30ha	토지이용현황과 공간 활용계획을 반영하도록 해 지역 맞춤형 단지 조성 유도
조성 방식	신규부지 조성 후 외에 기존 노후 축사 밀집 지역 재개발 방식 허용	기존부지 활용으로 민원 등 갈등 감소,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단축
사후 관리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 지정 유도	가축분뇨 지원화 시설 등 축산 관련 인프라를 집적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거점 조성

농식품부는 이번 스마트축산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5대 권역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모사업 평가 시 일자리 창출이나 정주환경 개선 등 축산업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계획에 대한 가점 부여, ▲최적지 발굴과 주민 공감대 형성 위한 공모기간 확대, ▲전문가 등으로 스마트축산단지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조성 희망 지방정부 대상 컨설팅 지원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 충청권(2.11), 호남권(2.20), 경기·강원권(2.26), 영남권(3.4), 제주권(3.6)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스마트축산단지는 축산업의 생산성 제고, 악취와 가축방역 관리 강화, 노후·난립 축사의 이전에 따른 농촌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공익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며, “축산업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고민하는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붙임 1.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개요
- 2.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현황

담당 부서	축산정책관실 축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311)
		담당자	사무관	박광덕 (044-201-2329)

## 붙임 1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개요

- (지원내용) 노후·난립 축사 등을 ICT기반을 갖춘 스마트축산단지로 집적화하기 위해 스마트축산단지 기반조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에 필요한 도로·전기 등 단지 기반조성 및 빅데이터 관제센터 설치(15ha 기준 국고지원 62.5억원/4년간)
  - 축사, 분뇨처리 및 방역시설 등은 기존 정책사업으로 패키지 지원
- (조성기간) 축산단지 기반시설 및 관제센터 완공까지 4년차 사업이며, 축사 신축이나 분뇨 처리 및 방역 관련 시설 등은 이와 별개로 지원
- (조성주체) 시·군·구 또는 시·도
- (조성기획) 지자체(시·군) 주도로 지역여건에 맞는 모델을 기획하고, 농가 부담금, 정부의 지원사업 등을 적극 연계하여 단지 조성
- (개소당 소요액) 총 사업비 95억원 / 국고 62.5억원(15ha 기준)

구분		조성면적 (최소 3ha~최대 30ha)					
		3ha			30ha		
		총액	국고	지방비	총액	국고	지방비
사업비	기반조성(ha당 500백만원)	1,500	1,050	450	15,000	10,500	4,500
	관제센터(개소당 1,000백만원)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계	3,500	2,050	1,450	16,000	11,500	5,500

\* (축산단지 기반조성비) ha당 500백만원(국고 350, 지방비 150),

\*\* (관제실 및 교육센터) 개소당 2,000백만원(국고 1,000, 지방비 1,000)

\*\*\* 연차별 사업비 : (1년차) 기반조성 10%(인·허가 및 설계비용 등), (2년차) 기반조성 10%(인·허가 및 설계비용 등), (3년차) 기반조성 80% + 관제실·교육센터 50%, (4년차) 관제실·교육센터 50%

## 붙임 2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현황

- (개요) '19년부터 노후·난립 축사를 스마트화·직접화하기 위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
- (추진유형) 준공 또는 정상 추진 중인 5개소는 조성 목적, 지역 민원, 향후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

① (당진 규모의 경제형) 경쟁력이 저하된 소규모 또는 고령농의 착유우를 수탁 사육해 경영비·인건비 절감 등 규모의 경제 실현

- 총 13.9ha에 축사 5개동, 공동 착유장, 빅데이터 관제센터 조성
- 관내 9개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착유우 966마리 동시 사육



② (논산 시설 현대화형) 노후 축사가 밀집된 지역을 재개발 방식으로 혁신해 생산성 향상, 악취저감 등 복합화된 현장문제 해소

- 총 7.5ha에 양돈장 13개소, 빅데이터 관제센터 조성 등
- 기존 양돈장(13개) 철거하고 2층 규모\* 스마트축사로 혁신

\* 사유규모: 기존 18천두 → 26(44.4%↑)



③ (고성 공간 재구조화형) 노후·난립 축사를 단지로 이전하고 분뇨처리시설 등을 집적화, 기존 축사는 철거 후 경로당·귀촌센터로 단장

- 총 8.7ha에 축사 10개동, 관제실, 공동 분뇨처리장 등
- 노후 11개 양돈장을 이전하고 사육규모 확대 등(18천두 → 32천두)



④ (고흥 신성장 구축형) 생산성이 낮은 간척지를 활용해 스마트축사와 유관 시설 등을 신축하고 투자여력 있는 축산농·청년농 등 유입

- 19.1ha에 한우 축사 26개동, 관제실, 인근에 축산 R&D 센터 등
- 사육규모 확대 축산농 이전(7동), 청년농 등 신규 임대·분양(19개동)



⑤ (담양 활력 창출형) 악취 저감, 시설현대화 등 소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청년농 유치 등 지역 활력 창출형 모델

- 총 3.1ha에 축사 7개동, 관제실, 분뇨처리시설 등
- 노후 한우 축사 이전 3개동, 청년농 등 신규농 임대·분양 4개동 등 총 1200마리 사육 규모로 조성



<자료화면 : 2025년 준공된 제1호 스마트축산단지(충남 당진 낙농단지)>

당진 단지 항공사진



당진 단지 우사 내부



당진 단지 전경 항공사진



당진 단지 공동착유장



당진 단지 빅데이터 관제센터 외부 및 내부

